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11. 14.

Vol. 57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11월 1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정훈

요약

I. 서론

II.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개요

III. 설문 결과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 연구는 지난 연구에 이어 탈석탄 주요 갈등 이슈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함
- **설문 대상자는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선발하고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
 -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과 신규 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이해관계자 세부 그룹별 50명 내외 인원을 선별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 참여함
-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함**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과 대응 주체, 탄소중립과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 탈석탄 정책의 동의 여부,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성에 대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유사한 응답 특성을 보임
 - 탈석탄 정책의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충남 지역주민의 동의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남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탈석탄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 일자리 감소를 꼽았으며, 일자리 갈등 이슈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관계된 갈등 이슈가 우선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이해관계자 그룹별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중요점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탈석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가 다르고 인식 정도가 다름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할 필요

I. 서론

-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탈석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연구를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진행함(정훈, 2022¹)
 - 지난 연구에서 탈석탄 정책 결정 단계와 이행 단계에서 각각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슈는 대부분 피해자와 비용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함
 - 정책 이행단계에서의 갈등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와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들간 의견 대립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단계별 갈등 이슈의 분류 및 이해관계자 범위

구분	갈등 이슈	이해관계자
정책결정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국회, 국민
정책이행		중앙정부 ↔ 국민 ↓ 노동자 발전사업자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사회 구성원

-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 갈등 이슈별로 갈등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갈등의 정도에서는 일자리 갈등이, 사회적 영향에서는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갈등 이슈로 선정되었음
 - 일자리 갈등의 주요 피해 당사자는 발전소 정규직 종사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요 피해 당사자에 해당함
- 탈석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탈석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피해 당사자인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출하였음
 -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탈석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1 정훈, (20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1호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주요 피해 당사자로 도출된 노동자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탈석탄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II.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개요

1) 설문 조사 방안 및 대상 선정

□ 설문 목적

-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를 받는 주요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탈석탄 정책 및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 이해관계자별 해당 갈등 이슈 쟁점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파악하고 이슈별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설문 대상 및 방법

- 갈등 이슈별 설문 대상자는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선별하고, 대상에 따라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²
- 설문 대상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과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정함³
- 설문 대상 이해관계자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충남/강원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각 50명 내외의 인원을 선별하여 총 191명을 대상으로 함
 - 정규직 노동자 : 한전 발전 5개사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⁴
 -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 동서발전의 1-2차 하청업체 노동자⁵와 KPS 비정규직 발전 노조원 중 충남과 강원지역에 기반을 둔 협력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방문 설문을 진행
 - 지역주민 : 기존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충남 보령, 태안과 신규 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 강릉 및 삼척의 발전소 주변지역 이·통장, 번영회 등 해당 지역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⁶

2 설문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행

3 현재 국내에는 총 5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그중 29기는 충남에, 6기는 강원도에 위치해 있고 강원도에서는 신규발전소 4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음. 충청남도 내에서는 당진에 10기, 태안에 10기, 보령에 8기, 서천에 1기가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동해에 4기, 삼척에 2기가 있고 신규 발전소는 삼척과 강릉에 각 2기씩 건설 중임

4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협조를 통해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 간부 명단을 제공받아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9.1%의 응답률을 보임

5 동서발전 협조를 통해 충남 및 강원 지역내 1-2차 하청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설문 대상자를 선정함

6 충남 및 강원도 지자체 협조를 통해 지역별 이통장 협의회 및 번영회 등의 명단을 제공받아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전 연락을 통해 채워지지 않은 인원과 명단확보가 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설문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진행

<표 1> 이해관계자 그룹별 설문 대상자 비율

이해관계자 구분		명수	비율, %	계
지역주민 (충남/강원)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59	57.3	103명
	지역소상공인	37	35.9	
	기타	7	6.8	
발전소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경상정비	38	76.0	50명
	연료환경설비	6	12.0	
	청소, 경비, 시설관리, 소방방재	6	12.0	
정규직 노동자	한전 5개 발전사 종사자	38	100.0	38명
계				191명

2) 설문 내용

- 설문 조사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인식,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⁷

<표 2>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

구분	질문 내용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 여부 • 기후변화 대응 주체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인지 여부 • 탈석탄 정책 추진 및 거주지역/근무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에 대한 인지 여부 • 탈석탄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반대 사유 • 지원정책 병행/전기요금 상향 조건별 탈석탄 동의 여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인지 여부와 의견 • 탈석탄 속도에 대한 의견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 우선순위 • 탈석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피해 당사자 • 지역사회/노동자 피해 정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 •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의견 • 지자체/석탄발전업계의 탈석탄 정책 대응에 대한 의견 • 지역사회/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점과 참여가 필요한 이해관계자 범위 • 탈석탄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국회의 역할 중요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종사하는 업무를 위한 해당 지역 이전 여부 • 발전소 폐쇄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

7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항목 중 일부 문항은 한국노동총과 사회공공연구원의 노동자 대상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함

3) 설문 응답자 특성

-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 그룹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지역주민 103명 중 총남에 거주하는 주민은 41명, 강원에 거주하는 주민은 62명이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인원이 94.2%, 그중 20년 이상 거주 인원은 70.9%임
 -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50명 중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84.0%, 그중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50.0%이며, 정규직 노동자 38명은 모두 노동조합 간부들로 10년 이상 근무 인원이 65.8%를 차지함

<표 3> 설문 응답자 유형별 특성

구분			지역주민				노동자			
			총남		강원		하청 및 비정규직		정규직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계			41	100.0	62	100.0	50	100.0	38	100.0
지역 (거주지/ 근무지)	총남	보령	25	61.0	/		-	-	2	5.3
		태안	16	39.0			14	28.0	2	5.3
		당진	-	-			6	12.0	6	15.8
		소계	41	100.0			20	40.0	10	26.3
	강원	강릉	/		17	27.4	10	20.0	1	2.6
		삼척			45	72.6	20	40.0	0	0.0
		소계			62	100.0	30	60.0	1	2.6
그 외		/		-	-	27	71.1			
거주/ 근무기간	1년 미만		0	0.0	2	3.2	2	4.0	2	5.3
	1~5년 미만		0	0.0	4	6.5	6	12.0	3	7.9
	5~10년 미만		0	0.0	9	14.5	17	34.0	8	21.1
	10~20년 미만		7	17.1	8	12.9	18	36.0	16	42.1
	20년 이상		34	82.9	39	62.9	7	14.0	9	23.7
성별	남자		27	65.9	42	67.7	49	98.0	36	94.7
	여자		14	34.1	20	32.3	1	2.0	2	5.3
연령	20대		0	0.0	4	6.5	4	8.0	0	0.0
	30대		0	0.0	13	21.0	9	18.0	9	23.7
	40대		1	2.4	17	27.4	24	48.0	13	34.2
	50대		9	22.0	10	16.1	9	18.0	16	42.1
	60대 이상		31	75.6	18	29.0	4	8.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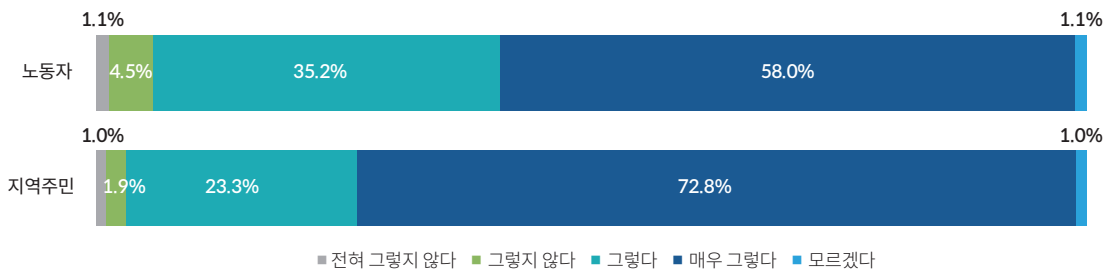
구분		지역주민				노동자			
		충남		강원		하청 및 비정규직		정규직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가구원수	1명	2	4.9	11	17.7	8	16.0	3	7.9
	2명	26	63.4	18	29.0	7	14.0	6	15.8
	3명	9	22.0	16	25.8	16	32.0	4	10.5
	4명	4	9.8	14	22.6	16	32.0	17	44.7
	5명 이상	0	0.0	3	4.8	3	6.0	8	21.1
직업	자영업	15	36.6	21	33.9				
	농/임/어업	22	53.7	1	1.6				
	생산/기술/노무직	0	0.0	19	30.6				
	사무직	1	2.4	10	16.1				
	전문직	0	0.0	7	11.3				
	서비스/영업/판매직	3	7.3	2	3.2				
	전업주부	0	0.0	2	3.2				

III.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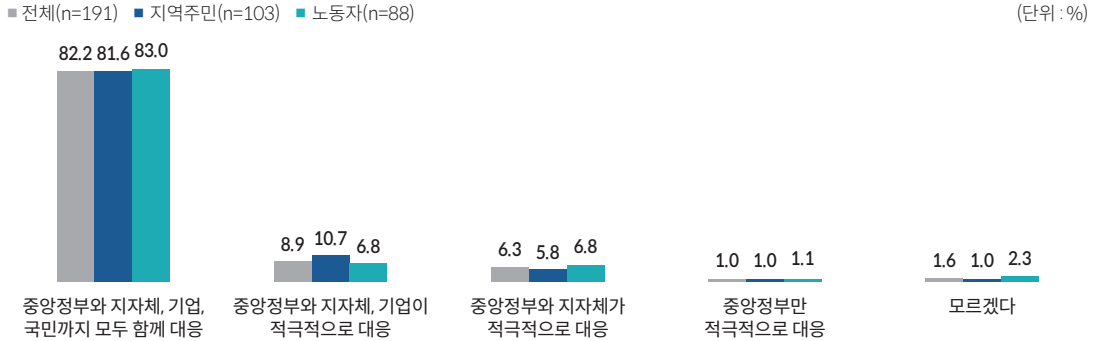
1)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 기후위기가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노동자들의 93.2%, 지역주민의 9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는 노동자의 83.0%, 지역주민의 81.5%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까지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함

Q1. 최근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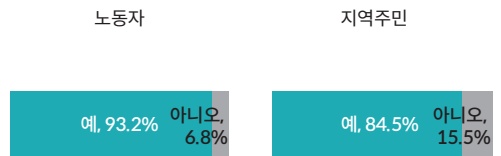
Q2. 귀하께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2050년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탈석탄 정책 추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과 강원 지역의 신규 발전소 건설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 2030년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그룹에서 84% 이상으로 높았으며, 탈석탄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93.2%, 지역주민의 77.7%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 그러나 노동자 그룹은 근무 중인 발전소의 폐쇄 시점과 강원도 신규 발전소 건설 사실에 대해 80% 이상 인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은 거주 지역 발전소 폐쇄 시점에 대해서는 25.2%만이 인지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 사실은 63.1%만 인지하고 있음
 - 강원도 신규 발전소 건설 사실에 대해 강원지역 주민의 경우 85.5%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남지역 주민은 29.3%만 인지

Q3.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Q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정책(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Q5.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내가 종사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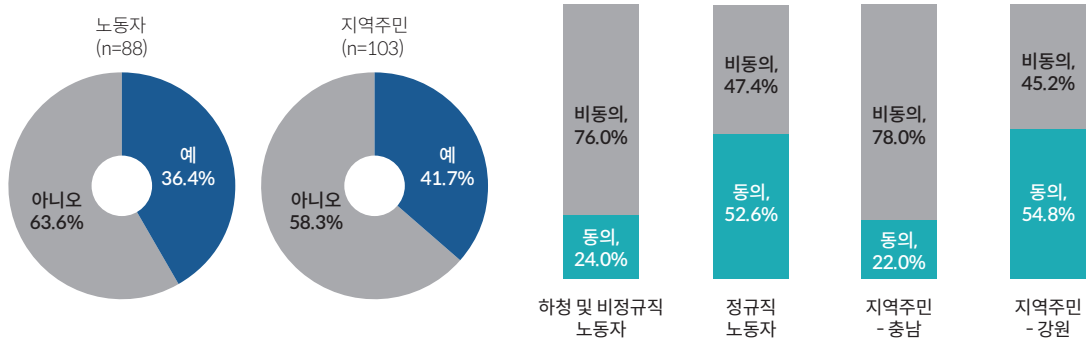
Q6.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강릉과 삼척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것을 알고 있다.



2) 탈석탄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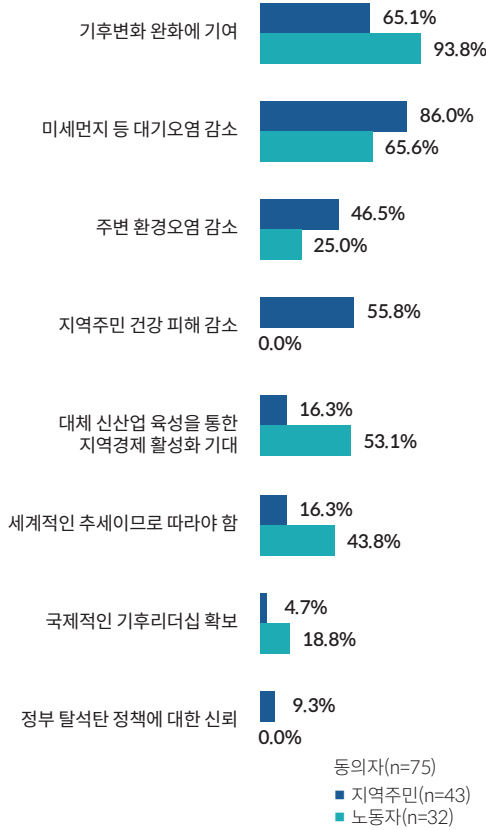
-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노동자 36.4%, 지역주민 41.7%로 낮았으며, 노동자 중에서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24.0%, 지역주민 중에서는 충남 지역이 22.0%로 더 저조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동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Q7.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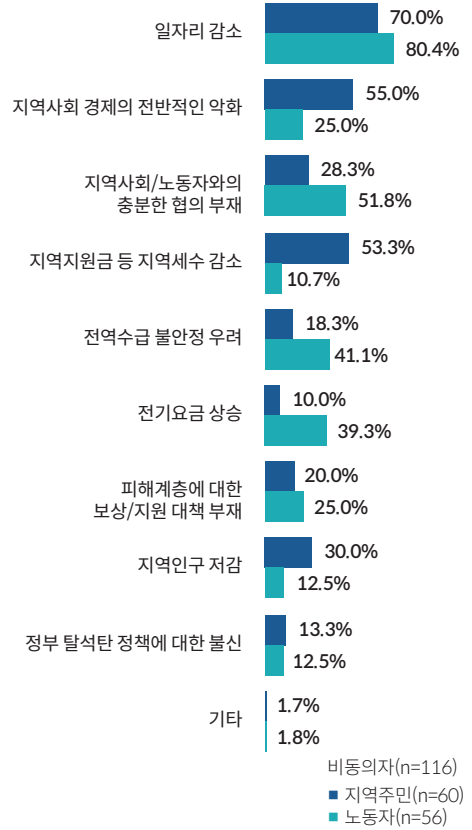


- 위 질문에서 탈석탄 정책에 동의한 응답자에게는 동의 사유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반대하는 사유를 3가지씩 선택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반대 사유 1순위는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탈석탄 정책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소’를 동의 사유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노동자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3순위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건강 피해 감소’를 3순위로 응답함
 -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일자리 감소’를 공통적으로 1순위로 꼽았으며, 노동자들은 ‘지역사회/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 부재’와 ‘전력수급 불안정 우려’를,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악화’와 ‘지역지원금 등 지역세수 감소’를 그 다음 순위로 응답함

Q8.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보기 중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Q9.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보기 중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지원정책이 병행될 경우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 탈석탄 정책에 대한 동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함

- 노동자는 고용보장이 되거나 실업급여/재취업 지원이 되는 경우 동의 비중이 72.7%로 증가하였으며, 지원정책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22.7%로 그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은 지역지원사업 혜택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 동의 비중이 75.7%로 증가하였으며, 강원 지역은 지원정책이 없더라도 동의한다는 비중이 37.1%인 반면, 충남지역은 지원정책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3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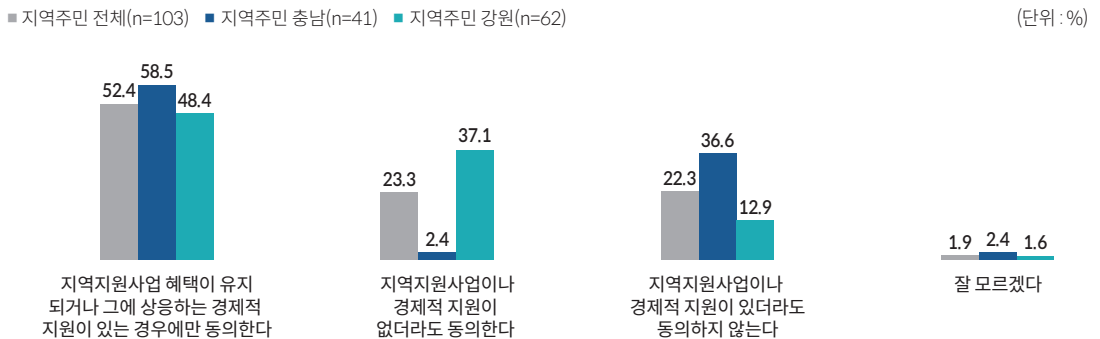
(노동자만)

Q10.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귀하께서 일부 피해를 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역주민만)

Q11.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귀하께서(지역사회가) 일부 피해를 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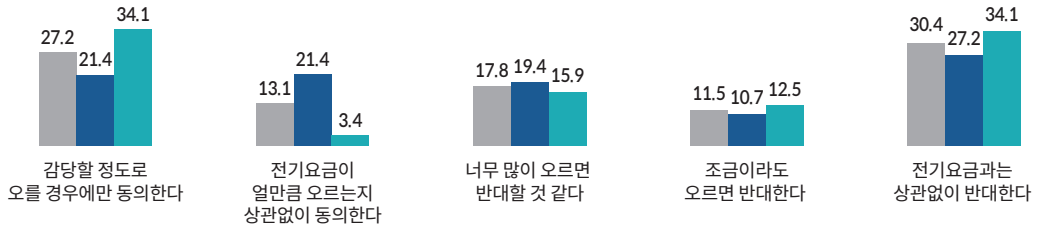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탈석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탈석탄 속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타남

- 전기요금이 감당할 수준까지 오를 경우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40.3%로 나타난 반면, 전기요금과는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은 30.4%, 요금이 증가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남
-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늦추는 등 합리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기존 속도 유지는 23.6%, 석탄발전소를 가능한 오래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남

Q12.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체(n=191) ■ 지역주민(n=103) ■ 노동자(n=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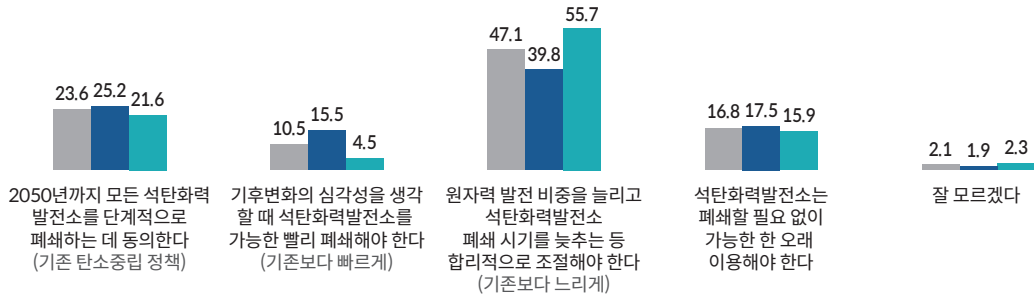
(단위 : %)



Q13. 귀하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계획(탈석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n=191) ■ 지역주민(n=103) ■ 노동자(n=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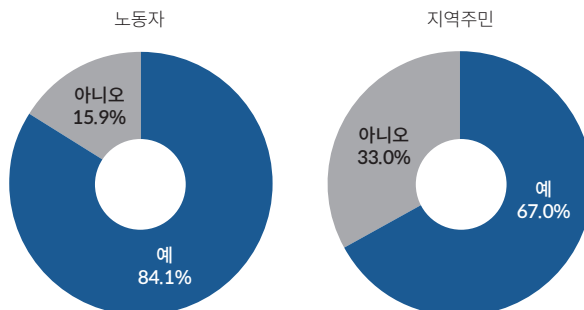
(단위 : %)



□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84.1%, 지역주민의 67.0%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주민의 85.4%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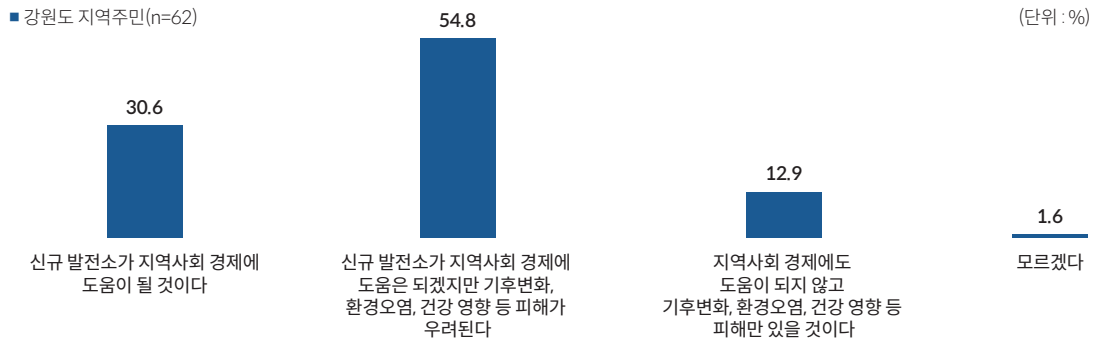
○ 강원도 지역주민 대부분은 신규 발전소가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67.7%로 높게 나타남

Q14. 귀하께서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지역주민만)

Q15. 귀하께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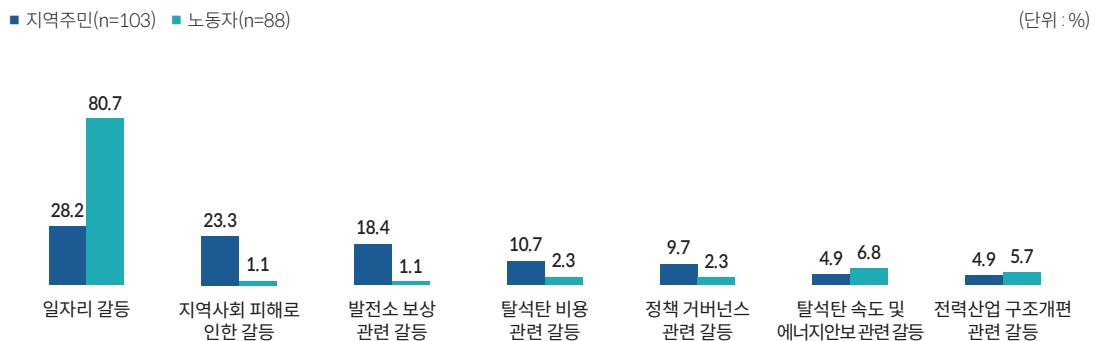


3)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피해 당사자 우선순위

□ 우선적으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갈등 이슈에 대해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일자리 갈등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응답비율과 전체적인 응답패턴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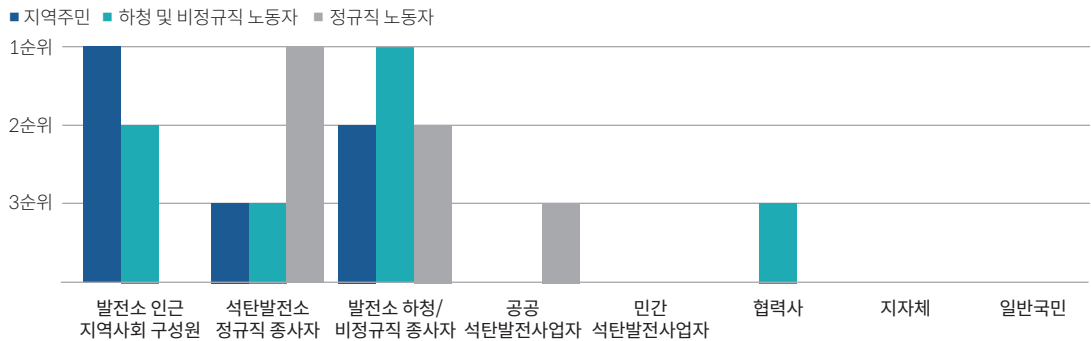
- 노동자는 80.7%가 일자리 갈등을 1순위로 집중 선택한 반면, 지역주민은 28.2%만 일자리를 선택하고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23.3%,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18.4%로 고르게 선택

Q16. 다음 제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중 우선적으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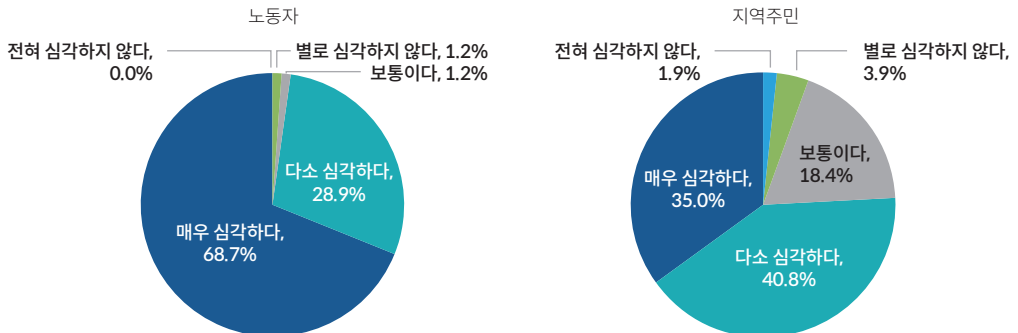
□ 탈석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피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노동자 그룹 모두 본인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1순위로 선택함

Q17. 귀하께서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피해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보기 중 세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노동자 및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는 97.6%, 지역주민은 75.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본인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룹의 피해정도를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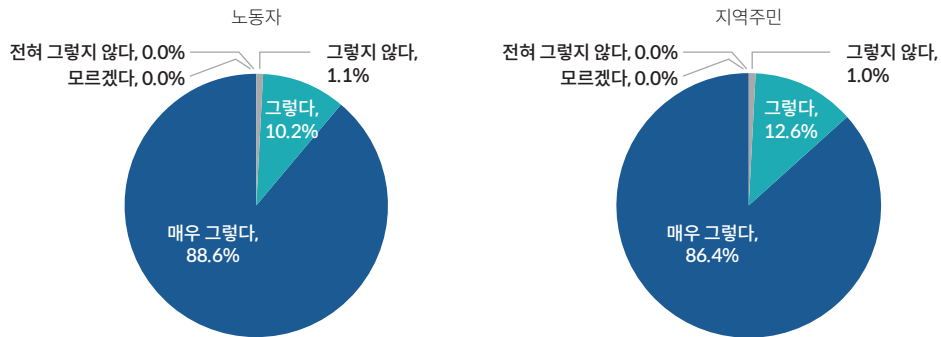
Q18.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노동자)노동자가 / (지역주민)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 및 필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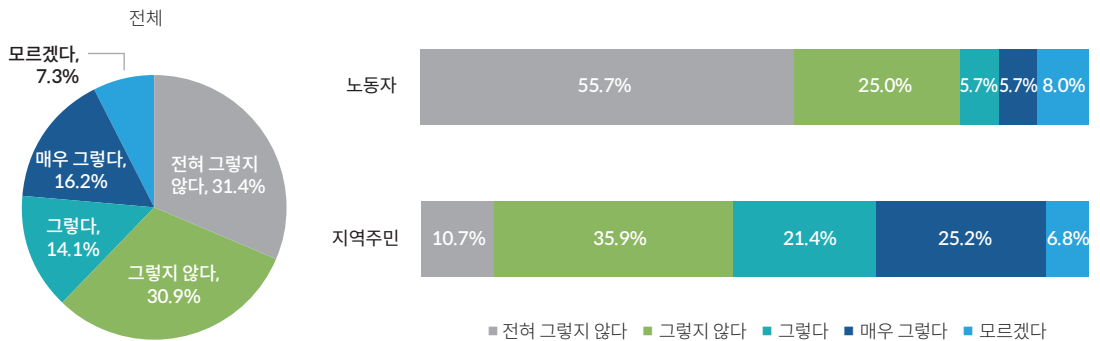
-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노동자의 98.8%, 지역주민의 9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보상·지원 정책을 필요로 함을 확인함

Q19. 귀하께서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정책(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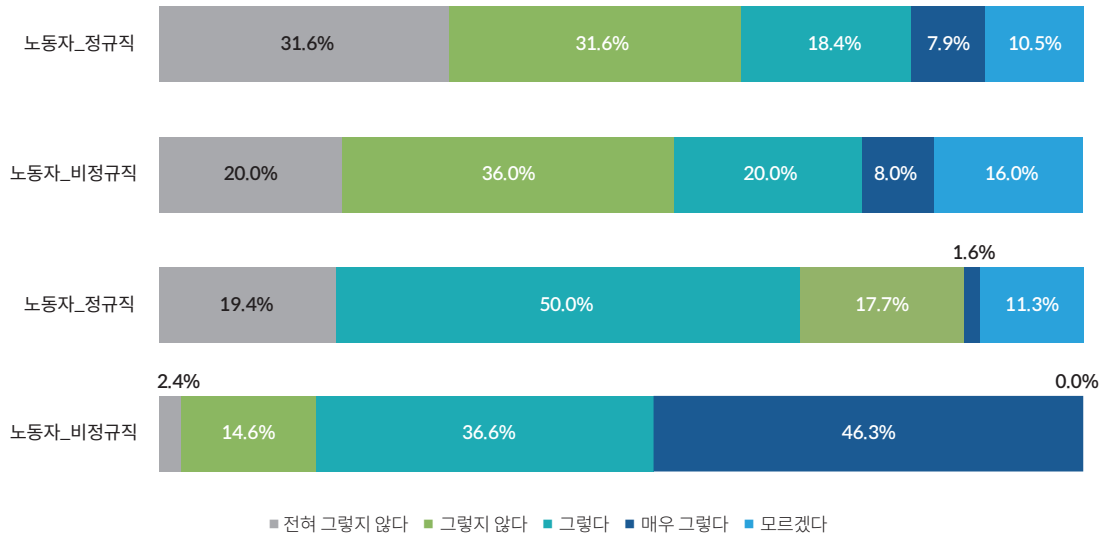
-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8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주민은 46.6%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Q20. 귀하께서는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탈석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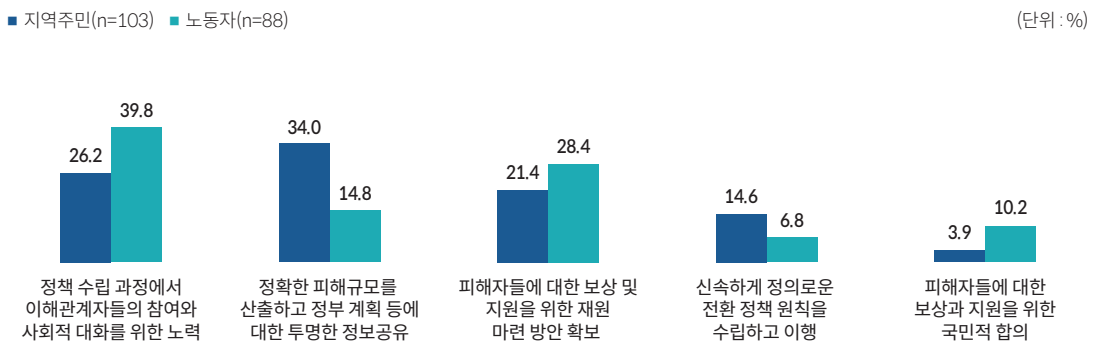
- 노동자에게는 석탄발전업계가, 지역주민에게는 지자체가 탈석탄 정책에 잘 대응하는지 질문한 결과, 노동자는 59.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역주민은 4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응답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주민의 경우 충남 주민은 82.9%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원 주민은 6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지역별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Q21. 귀하께서는 (노동자)발전소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업체가 / (지역주민)발전소를 유치한 지자체가 탈석탄 정책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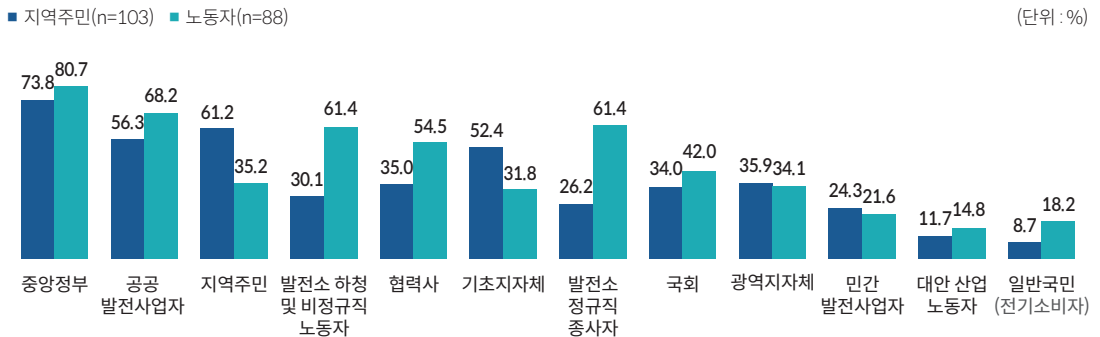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주민은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정부 계획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Q22.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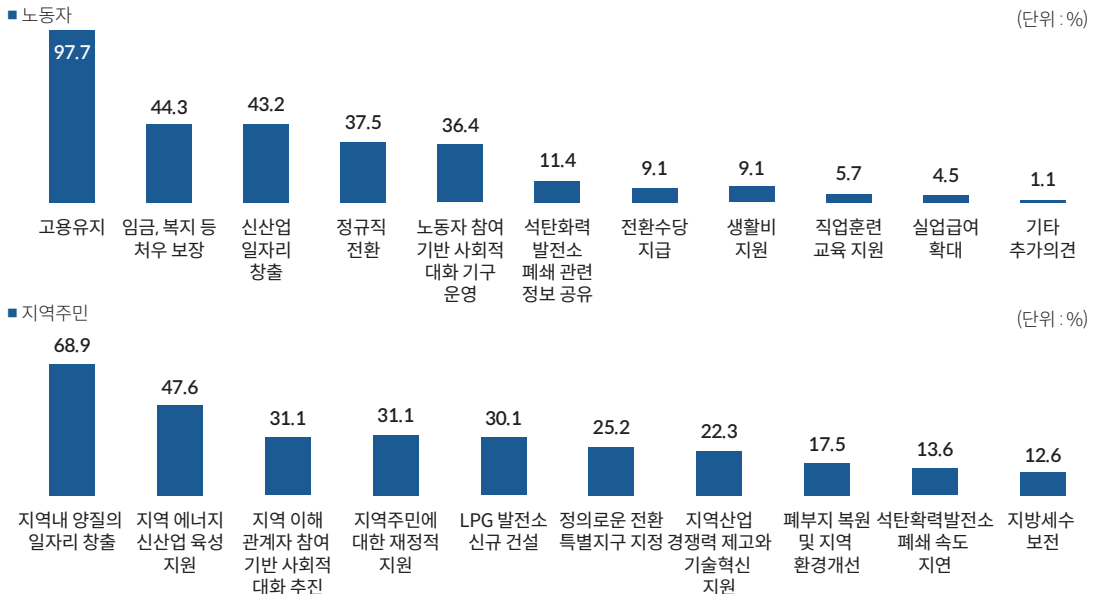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가 필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노동자는 정부와 공공발전 사업자,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협력사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역주민, 공공발전 사업자, 기초지자체 순으로 선택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 위주로 선택하였음을 확인

Q23. 탈석탄에 따른 피해당사자들의 지원, 보상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해관계자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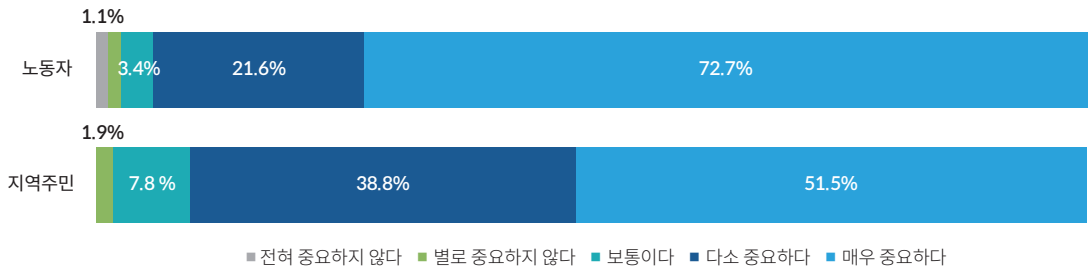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노동자는 고용유지와 처우 보장,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주민은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에너지 신사업 육성 지원,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Q24. 탈석탄으로 인한 노동자/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의 94.3%, 지역주민의 90.3%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Q25. 귀하께서는 탈석탄 정책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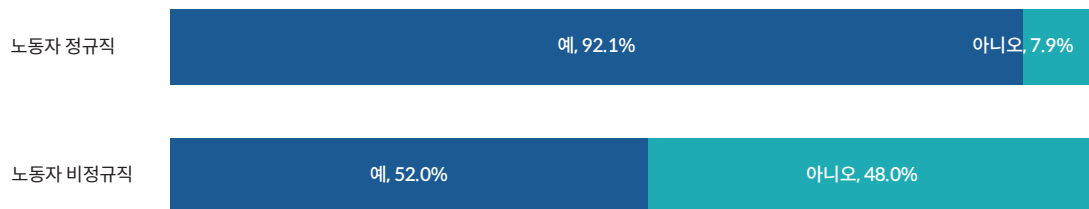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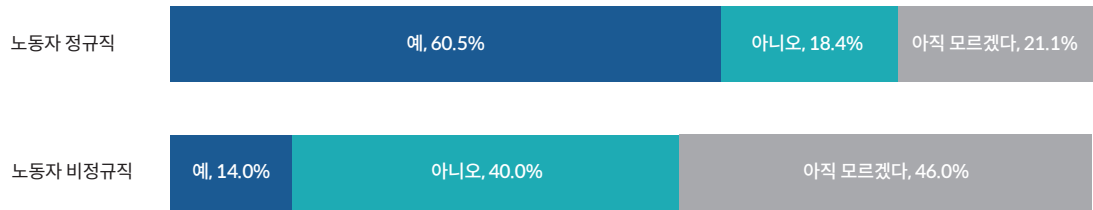
□ 노동자들에게만 현재 종사하고 근무지로의 이전 여부와 발전소 폐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 유무를 묻는 질문을 하여 발전소 폐쇄가 지역사회 일자리 및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

- 현재 종사 중인 업체 근무를 위해 현재 거주지로의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의 92.1%는 이전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0%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하청 및 비정규직 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
- 석탄발전소 폐쇄 시 정규직 노동자는 60.5%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86.0%가 이주하지 않거나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구 유출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 비중이 높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로 인해 지역내 대체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됨

Q26. 귀하께서는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업체 근무를 위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으로 이주 하셨습니다습니까?



**Q27. 귀하께서는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향후에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IV. 결론 및 시사점

- **탈석탄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탄소중립 정책과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과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지도는 이해관계자 그룹별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
 -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94.8%가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자의 90% 이상, 지역주민의 80% 가량이 탄소중립 정책과 탈석탄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 그러나, 종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에 대해 노동자는 80.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주민은 25.2%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노동자 대비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이는 최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담론이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중심의 접근은 아직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탈석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탄소중립과 탈석탄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 탈석탄에 따른 피해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이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각각 36.4%, 41.7%로 낮게 나타났으나, 피해와 손실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동의 비중이 각각 70% 넘게 증가하였음
 - 앞서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뿐 아니라 국민까지 대응 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도 탈석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가 다르고 인식 정도가 다르므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설문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관계된 갈등 이슈가 정책적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본인들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시 노동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역주민은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르게 인식함을 확인
 - 또한, 같은 이해관계자 그룹 내에서도 지역, 사회적 역할과 고용 유형에 따라 다른 인식과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되 세부 이해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지원 및 보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며, 일자리 문제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탈석탄 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감소를 꼽았으며, 우선적으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갈등 이슈로 일자리 갈등을 1순위로 선택함
 -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유지와 처우보장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꼽혔으며,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이 꼽힘
 -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요인이 되어왔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역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 신산업 육성 등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
 - 정규직 노동자는 발전소 근무를 위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주한 비중이 높고 발전소 폐쇄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 석탄발전소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
 -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주는 지역내 소비 감소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석탄발전소 관련 지원금 축소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주민 비중이 높고 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타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낮아 이를 고려한 지역내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다만, 설문 규모가 크지 않아 이러한 해석을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90% 이상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국회는 탈석탄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여 정의로운 전환 이행력을 담보하고,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하여 탈석탄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참고문헌

- 정훈, (20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1호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2.7),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조합원 실태조사 (한국노총 용역보고서)
- 이재훈, (2022.7), 발전비정규노동자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 자료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을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외 4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48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7.11.
49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7.25.
50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8.8.
51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8.22.
52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2022.9.5.
53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9.19.
54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10.17.
55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24.
5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31.
57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14.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